

“정년연장 문제 피할 수 없고, 청년의 기회 빼앗아선 안 돼”

민주당 정년연장TF 토론회

‘일자리 감소 우려’ 청년 목소리 들어 정치권 “은퇴 이후 소득공백 메워야” 경영계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청년 “모든 세대 공존할 수 있어야”



민주당 정년연장TF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청년의 내일을 위한 오늘의 질문’ 토론회를 열었다. 정년연장TF는 출범식 후 열린 첫 공식 토론회에서 자유토론을 하며, 정년 연장에 따른 질 좋은 일자리 감소 가능성을 우려하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박태홍 기자

법정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시작 연령을 맞추는 ‘정년 연장’ 문제가 6·3 조기대선을 앞두고 세간의 관심을 받는 가운데, 21일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 태스크포스(TF)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들은 가뜰이나 좁은 취업 문이 정년 연장으로 더 좁아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드러내며 정치권에 상생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당 정년연장TF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청년의 내일을 위한 오늘의 질문’ 토론회를 열었다. 정년연장TF는 출범식 후 열린 첫 공식 토론회에서 자유토론을 하며, 정년 연장에 따른 질 좋은 일자리 감소 가능성을 우려하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현재 법정 정년은 60세로 지난 2017년에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면 실시됐다. 정치권은 법정 정년을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 65세에 맞춰 은퇴 이후 ‘소득 공백’을 메워야 한다며 각당의 안을 준비 중이다.

경영계 입장에서 정년연장의 문제점을 발제한 임영태 한국경영자총협회 본부장은 법적 정년연장의 혜택이 노동조합이 있는 대기업 정규직에 집중돼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키고 고령자 정년 연장이 청년 고용 여력 감소로 이어져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 갈등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연공형 임금체계가 편중된 상태에서 정년 연장을 하면 고용 비용이 늘고 인사 적체가 심해지는 등 경영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했다.

임 본부장은 정년 연장보다, 정년 도달 시 퇴직 후 기업이 재고용하는 방식의 고용 정책을 활용해야 직무와 성과

에 기반한 임금체계로 개편을 가능하게 하고, 근로 시간 등 기타 근로조건도 유연하게 다시 설계할 수 있다고 했다.

유정엽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본부장은 국가가 정년연령과 연금 개시연령을 일치시켜 소득공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법적 정년제도의 원칙’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본부장은 경영계가 정년 연장의 혜택이 대기업·공공기관 정규직에 쏠릴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100인 이상 기업 95% 이상이 정년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전반적인 고령자의 퇴직연령의 상승을 유도할 것이라고 봤다.

또한 경영계가 주장하는 퇴직 후 재

고용 방식은 계약직, 축적직, 단시간 등 비정규직 고용형태로 고용불안정을 유발한다고 했다. 정년 도달자와 청년 취업자는 숙련과 경험 차이로 청년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한정적이라고도 주장했다.

청년들은 정년 연장이 세대 갈등이 아니라 모두를 아우르고 공존할 수 있는 안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세라 청년은 “일본의 경우 정년을 65세까지 보장하고 독일과 프랑스는 정년과 연금 수급 나이가 얼추 일치한다. 한국은 소득 공백기가 5년으로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정년이 늘어나면 연공제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고 돈만 많이

받는 인력이 늘어 기업이 부담된다는 목소리도 공감이 된다”고 말했다. 이세라 청년은 “고령자 임금은 실제 임무와 역할에 맞게 조정하고 청년 일자리를 함께 확보하는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상혁 청년은 “청년 입장에서 정년 연장이 근속 연장이 아니라 커리어의 시작점이 밀리고 일자리의 문이 좁아지는 문제로 직결된다”며 “기업들은 실제로 정년 60세 유지 후 필요시 재고용 방식을 선호한다. 단순 비용을 넘어서 연공서열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세대·역할 전환을 가능케 하는 현실적 전략”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년 고용 쿼터제로 인센티브를 확대하든지, 정년 연장신규채용 의무화를 마련하든지, 이를 시행한 기업에 세제 감면, 채용 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병훈TF 위원장은 토론회 마무리 발언에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께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년 문제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했다”며 “정년 연장 문제는 피할 수 없고, 청년의 기회를 빼앗아가는 제도가 돼선 안 되기 때문에 조화롭게 만들어서 모두가 만족할 수 없지만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제도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국민의힘, 1차 경선 ‘100% 여론조사’ 실시

오늘 2차 경선진출자 4명 발표 안철수-나경원, 거친 언사 오가 홍준표, 한동훈에 원색적 질문

국민의힘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2차 경선 진출자 4명을 추리기 위한 ‘100% 국민여론조사’를 21일부터 이틀 동안 실시한 가운데, 후보 간 신경전이 오가는 등 후보들의 입이 거칠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21~22일까지 총 5개 여론조사 기관이 총 4000명의 표본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여론조사 종료 후 득표율이나 순위를 공개하지 않고 22일 오후 7시경 2차 경선 진출자 4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역선택 방지 조항’을 포함한 100% 국민여론조사 방식을 사용하며, 다른 정당 지지층을 배제한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을 상대로 실시된다.

최근 여론조사에선 김문수·홍준표·한동훈 후보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안철수·나경원 후보 중 2차 경선에 진출하느냐가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안 후보가 2차 경선에 진출하면, 탄핵 반대파 2명(김문수·홍준표 후보)과 탄핵 찬성파(한동훈·안철수 후보)가 각 2명씩 균형을 이룰 것으로 보이며, 나 후보가 2차 경선에 진출하면 탄핵 반대파가 3명으로 한 후보가 수세에 몰릴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안철수·나경원 후보는 서로 거친 언사를 주고 받으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대구시당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사무실 앞에 대선 경선 후보자 포스터가 붙어있다. /뉴스시

열고 “반탄(탄핵 반대) 후보가 우리 당 대선후보로 뽑히면 대선은 필패다. 어제(20일) 우리당 대선후보 경선 토론회는 그야말로 가관이었다”라며 “마치 ‘당 대표 경선토론회’라 봐도 무방할 정도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나경원 후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끌어들이지 말라고 하셨나”라며 “윤 전 대통령이 본인에게 대선에 나가라고 하셨다면서 흘리다가, 토론에서는 막상 불리하니 윤 전 대통령을 언급하지 말라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도 이 정도까지는 못한다”고 덧붙였다.

나 후보도 같은날 대구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 후보에 대해 “급하진 것 같다. 제가 드릴 말씀은 탄핵을 반대하는 분도, 찬성하는 분도 다 마음을 모아서 결국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균등히 하고 미래로 가야 된다”고 반박했다. 한편, 전날 대선 경선 B조 토론회에

서 홍준표 후보가 한동훈 후보에게 “키도 크신데, 뭐 하려고 키높이구두를 신나”, “생머리나, 보정숙을 입었냐”는니 이 질문도 유지해서 안 하겠다”라고 원색적인 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 친한(친한동훈)계는 반박했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창피하고 화가 난다. 지지율 선두권에 있는 후보가, 그것도 당대표 지내고 대선후보까지 한 분이 B급 질문으로 자기 시간 쓰고 있으니 말이다”라며 “정치선 배라면서 술자리 뒷담화에서나 끼적거리며 할 농담을 우리당 경선토론회에서 거리낌 없이 하고 있으니 말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홍 후보는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외모에 집착하고 셀카만 찍는건 나르시시스트에 불과하다”며 “겉보다 속이 충만해야 통찰력이 생기고 지혜가 나오고 해안이 생기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태홍 기자

이재명, 대선후보 지지율 첫 ‘50%대’ 기록

3차 가상대결서도 ‘더블스코어’ 격차 정권 심판론, 8주째 오차범위 밖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처음으로 50%대에 올라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정권 심판론 역시 8주 연속 정권 연장론을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6~18일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재명 후보는 전주보다 1.4%포인트 오른 50.2%를 기록했다. 이 후보가 최근 실시된 대선주자 적합도 조사(리얼미터 기준)에서 지지도 50%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후보에 이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12.2%, 한동훈 후보 8.5%, 홍준표 후보 7.5%, 나경원 후보 4.0%, 안철수 후보 3.7%였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3.5%, 민주당의 경선후보인 김동연 경기지사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각각 2.0%, 1.8%였다.

이번주 적합도 조사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제외됐는데, 해당 표심이 국민의힘 후보들에게 고루 나눠진 것으로 보인다.

차기 대선 민주당 후보 적합도 집계 결과, 이재명 후보 53.4%, 김동연 후보 17.3%, 김경수 후보 5.7% 등의 순이다.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 내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82.9%, 김동연 후보 5.5%, 김경수 3.1%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에서는 김문수 후보 18.6%, 한동훈 후보 14.9%, 홍준표 후보 12.4%, 안철수 후보 9.6%, 나

경원 후보 6.4%, 유정복 후보 2.3%, 양향자 후보 2.2%, 이철우 후보 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후보는 범보수 주자들과의 3차 가상대결에서도 ‘더블스코어’에 가까운 차이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이재명 후보는 54% 정도의 지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나머지 후보들과 큰 차이를 보이는 상황이다.

이재명·김문수·이준석 후보가 3차 가상 대결을 벌일 경우 54.2%, 23.6%, 6.1%의 지지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없음은 11.7%, 잘 모름은 4.4%다. ‘이재명·한동훈·이준석’ 3차 가상대결에서는 각각 54.6%, 20.5%, 6%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한편 국민 10명 중 6명이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고 답했다. 8주째 ‘정권 연장론’을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선 것이다.

리얼미터-에너지경제신문의 차기 대선 집권세력 선호도 조사에서는 전체의 59.9%가 ‘민주당 등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라고 답했고, ‘국민의힘의 정권 연장’은 34.3%이며 5.8%는 ‘잘 모른다’고 답했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교체론은 1.2%포인트 상승했고, 연장론은 1.0%포인트 하락했다. 2월 4주 차 이후 8주째 오차범위 밖에서 정권 교체가 정권 연장론을 앞지른 것이다.

이번 조사는 16~1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만2847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최종 1504명이 응답을 완료했고 6.6%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서예진 기자 syj@